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00-0000-000000-0000

2005년도
수산업 · 어촌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해양수산부

〈 차례 〉

I. 안정적인 어업경영 지원	1
1.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2
2. 어업인 상호금융저리자금 상환연장	3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4
4. 어선원 보험급여 혜택 확대	5
5. 어업인후계자 활성화 방안 마련	6
6. 여성 어업인의 지원 확대	7
7.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일원화	8
8.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9
9. 제2회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10
10.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 확대	11
11. 어류양식 현황조사 최초 실시	11
12. 수산통계 신뢰도 제고	12
II.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13
13. 50여 년간 지속되어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근절	14
14. 확산단계에 도달한 자율관리어업	15
15. 2015년 연근해 수산자원량 1,000만톤 달성	17
16. 과도한 포획·채취 행위를 제한하는 내수면어업법 개정	19
17. 낚시어선 및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 강화	20
18. 내수면 생태정보 홍보안내판 설치	21
19. 본격적인 모습 드러낸 통영 바다목장에 관심 집중	22
20. 정치망어업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 출범	23
21. 선택적으로 포획 가능한 연안통발 어구 제도개선	25
22. 수산자원관리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26
23.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예정	27
24.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실효성 제고	28
25.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도입	29
26. 연안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한 선복량 제한기준 설정	30
27.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입찰제 성공적으로 정착	31
28.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실시 합의	32
29. 첨단 어업지도선 2척 확충	33
30. 바다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34

Ⅲ. 안정적인 연근해 어업기반 마련 및 양식산업의 육성	35
31. 2006년도 한·중 입어협상 타결	36
32. 2006년도 한·일 어업협상 타결	37
33. 한·중 어업지도단속 공조강화	39
34. 한·중 양국, 서해접경수역 중국어선 침범방지 5개항 합의	40
35. 한·중·일 3국 수산단체장 첫 협의회 개최	41
36. 동·서해 접경지역 어장확장	42
37. 연근해어업의 구조 대폭 재편 및 업종 통폐합	42
38. 연평도 꽃게조업시기 3월 1일로 앞당겨 조정	43
39. 전복가두리에 다시마·미역 복합양식 등 면허제도 개선	43
40. 물고기 진료시대 개막	44
41. 배합사료 직불제 활성화	45
42. 수산동물의 질병 방역체계 구축	46
43. 외해 수증가두리 양식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	47
44. 환경보전과 경비절감을 위한 굴 껍질 자원 재활용	48
45. 적조피해 최소화	49
46. 피조개 종묘 관세감면, 양식업계 부담 경감	50
Ⅳ. 활력 있는 어촌건설	51
47. 105개 국가어항 안전관리체계 구축	52
48.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53
49. 부산 대변항 등 5개 다기능어항 본격 개발	54
50.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어항 완공률 77%로 제고	55
51. 어촌관광 3개 모델 24개소 개발 추진	56
52. 어항법을 대체한 어촌·어항법 제정시행	57
53. 여름철 어촌관광객 4천만명 돌파	58
54. 도시와 어촌의 상생을 위한 교류	59
Ⅴ.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60
55. 바다도 위생등급 시대 개막	61

56.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과 무관	62
57.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63
58. 횡감용 수산물도 품질인증제 시행	64
59. 싱싱회 소비촉진	65
60.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운영	66
61. 서울수산식품전시회 개최	67
VI. 원양어업 경쟁력 제고	68
62. 유엔의 저충트를 및 참치연승 논의에 적극 대응	69
63. 호주(濠洲) 수역내 원양어업 진출기반 마련	70
64. 침체된 원양어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71
65. 러시아수역 명태 어획쿼터 6,000톤 추가 확보	72
66. '06년도 러시아수역 어획쿼터 합의	73
67. 원양어선등 연료비 절감 연구개발 성공	74
VII.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75
68. WTO 제소를 통해 對日 김 수입쿼터(IQ) 대폭 확대	76
69. 수산분야 대외 경제 협력 확대 추진	77
70. 수산분야 대외 협력·홍보 활동 강화	78
71.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온다	79
72. 제2차 APEC 해양장관회의에서 주도적 역할	80
73.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 울산총회 성공적 개최	81
74. 적극적인 WTO/DDA 협상 대응 추진	82
75. WTO 제6차 홍콩각료회의 참석 및 결과	83
76. 민·관 국제협상 대응능력 강화	84
77. FTA 수산분야 협상대응 강화	85
78. 수산물 수입증가, 조정관세로 억제	86
79. 새로운 해외시장개척	87
80. 수산물 수출 촉진	88
81.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가입	89

I . 안정적인 어업경영 지원

1.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하·적용하게 되었다.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자금은 2005년도 기준 연리 3.0%를 초과하는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의 융자금과 수산발전기금’으로 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 어업인은 연리 3.0%(기존 4.0% 내지 5.0%)로 적용하고, 비어업인(일반업체)은 연리 4.0%(기존 4.5% 내지 5.5%)로 인하된다.

한편, 매년 태·폭풍, 호우, 폭설 및 적조 등 재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용 융자금’도 기존 연리 4.0%에서 1.5%로 대폭 인하·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사용자의 이자부담이 연간 약 44억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 대출금리 인하내역 ('05.12.31 이전 대출분 포함)

자금(기금)명	인하대상	2006.1.1 이후 적용		이자부담 경감 (연간)
		어업인 (생산자단체 포함)	비어업인 (일반업체)	
농특회계 융자금	연3.0% 초과	3.0%	4.0%	약 44억원 (농특 14, 기금 28, 피해복구자금 2)
수산발전기금				
재해복구용 융자금	연4.0%	연1.5%		

주)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 제8호 해당자(원양어업자 제외)

생산자단체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조합과 중앙회 및 제15조 제1항의 어촌계, 수산업법 제9조의2에 의거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이에 앞서 어업인(영어조합법인 포함)에 대해서는 “2003년 말까지 대출받은 대출기간 1년을 초과하는 농특회계 융자금과 재해복구용 융자금”에 대해 2004년 어가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3월 5일부터 연리 1.5%로 인하한 바 있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과장 선원표, 사무관 김봉현

2. 어업인 상호금융 저리자금 상환연장

지난 2001년에 연 3.0%('04. 3. 5 부터)로 5년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바 있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5년 또는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2005.12.29 개정·공포·시행하였다.

분할상환 연기는 당초 상환 도래 일이 속해 있는 연도의 1월부터 6월 말까지 대출받은 수협에 신청하고 수협에 설치된 어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하게 된다.

대상 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초 연 6.5%로 5년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으로 지원됐던 자금이다.

이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부채 상환을 유도·촉진하고자 취한 조치다.

분할 상환연기 조건은 차등을 두어 2001년에 대출받은 자금의 10%를 당초 상환기일까지 상환하는 자는 앞으로 연 3.0%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건상 대출액의 10%를 상환하지 못한 자는 연 5.0%로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원금 분할 상환에 따라 2006년도에 53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른 분할 상환 연장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일인 2006년과 2007년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는 자에 대해서는 납입할 이자(최대 1년분)의 40%를 되돌려 주는 정상 상환 인센티브제도도 함께 운용된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과장 선원표, 사무관 김봉현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보험료 징수액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보험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선원 보험요율을 평균 10.3% 인상 적용하고,

이에 따른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톤미만 영세어선주의 순보험료를 50%에서 60%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어선보험도 기관 단독 사고를 별도의 특약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본요율을 평균 5.3% 인하하여 어업인의 실질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보험가입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 5~6월중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초기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만화로 알아보는 정책보험 설명서」 제작배부, 어업무선방송 연중실시, 수산전문지 광고와 정책보험 홈페이지(www.suhyup-ins.com)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고 다발지역 등을 수록한 특수해도 10,000부를 제작하여 출입항신고소 등을 통하여 어선주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보험규약을 개정해 어선보험의 최대보험가입금액의 계산범위에 손해방지비용과 임의구조비를 제외하고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험혜택을 늘렸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를 절대적 면책사유에 포함시키는 한편, 충돌손해배상 및 인명손해배상특약의 보상한도를 법률에 근거한 책임제한액으로 가입하도록 해 어선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어선 감정평가서의 유효 적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해 어선 평가에 따른 어선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사무관 임남철

4. 어선원 보험급여 혜택 확대

어선원의 임금을 산정 또는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기준임금이 2006년도에 ▲5톤미만 1,498,520원 ▲5~20톤 1,577,400원 ▲20톤이상 1,656,2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4.3~16.5% 인상된 것이나 2005년 10월 고시된 어선원 재해보상 최저임금 1,577,400원과 비슷하여, 보험료 상승은 거의 없지만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입은 재해로 인한 보상액은 동 인상률 만큼 확대된다.

한편, 2005년도에는 어선원보험에 10,099척(승선어선원은 36,431명), 어선보험에 4,925척이 가입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어선원보험은 552척, 어선보험은 205척이 각각 증가한 척수다.

또한, 2005년도에는 총 596억원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금으로 64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보험금지급액 191억원보다 3.9배가 증가하였다.

어선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어선원 1인당 606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8,665명의 재해발생 어선원이 1인당 평균 3,929천원의 보험혜택을 받았고, 어선보험은 보험가입자 1인당 4,214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2,523척의 재해발생 어선이 척당 평균 12,099천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 보험금 지급실적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내역	2004년		2005년		증가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어선원 보 험	사망실종	91	5,647	234	13,814	157%	145%
	부상질병	2,933	4,865	8,431	20,234	187%	316%
	계	3,024	10,512	8,665	34,048	187%	224%
어 선 보 험	선체	254	2,373	866	13,026	241%	449%
	기관	838	6,263	1,657	17,499	98%	179%
	계	1,092	8,636	2,523	30,525	131%	253%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사무관 임남철

5. 어업인후계자 활성화 방안 마련

어업인후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정부예산사정으로 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중도 탈락되는 선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촌으로의 신규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다각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업인후계자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 (해양수산부 훈령, 2005.10.26)』을 제정·시행 하였다.

어업인후계자 육성방안에는 어업생산구조개편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대비한 적정 어업경영자 수를 설정하고, 2011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수산경영인 2만명 확보를 목표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어업인후계자 선정제도를 『지원 후 선정에서 선정 후 지원』으로 개선하여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기술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 제정을 통하여 어업인후계자 선정기준의 재정비와, 선정 및 관리기관을 지방청 및 지자체의 이원화에서 지방청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육성자금 상환 완료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한 어업인후계인력 확보와 신규 창업어가에 대한 안정적인 영여정착을 위하여 『어업인턴제』, 『대학생 창업 연수제』, 『창업어가 후견인제』가 2007년부터 시범도입 되며, WTO/FTA대비한 어업인후계자 자질향상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어촌으로의 신규인력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인 기술·경영지도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사무관 이종욱

6. 여성 어업인 지원 확대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9명이 참석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2005. 2. 1 개최되어, 농업인위주로 지원되어온 농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에 어업인도 포함되도록 합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특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으며,

기본계획 내용 중 현재 농림부에서 지원중인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를 농어가도우미*, 여성농어업인센터**로 변경·시행하기로 의결하여 여성업인 57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농어가도우미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으로 영농(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농(어)를 대행

** 여성농어업인센터 : 여성농어업인에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 보육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어)활동 지원

또한 농어업인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대상을 ▶동력선 규모 50톤이하→90톤이하, ▶양식사업규모 중 살포·투석식 14ha미만→20ha미만, 가두리 1.0ha미만→2.0ha미만, 축제식 5.0ha미만→10.0ha미만, 육상수조식 0.1ha미만→0.2ha미만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여성어업인의 안정적 영어활동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사무관 이종욱

7.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일원화

정부는 종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으로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던 수산부문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2005년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다.

2001년 7월부터 수산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부문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의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지난해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산부문 이관에 전격 합의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 이관에 필요한 작업을 원만히 수행한 끝에 2005년 1월 이관작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지난해 2,100억원 수준에서 2005년 6,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농안기금의 수산부문 이관에 따라 수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수산발전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기금의 효율성 제고로 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확대는 물론 정부의 수산물 수급 및 유통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동안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두 기금에서 분산 지원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이 있어 왔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과장 선원표, 사무관 김용태

8.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향후 5년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목표로 총 5조 6천억원을 투융자 하는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발효 등 어려워진 어업여건에 따라 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어업인지원특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00년~’04년에 걸친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 이어 ‘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이번 대책에서 새로운 수산정책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첫째, 기존의 일방수혜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어업인의 자율을 확대해 나가고
둘째, 종전의 지역적, 사업적 특성을 무시한 일괄균등 지원을 지양,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의 발굴·확산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셋째,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수요중심으로의 정책전환으로 수산식품의 웰빙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WTO-DDA/FTA 협상대응』, 『수산자원회복』, 『생산구조개편』, 『선진어업질서의 정착과 해양환경 개선』, 『소비자 지향적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어촌지역 활성화』 등 8개 중점추진과제를 대책 기간 중에 추진하게 된다.

동 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연근해 어업자원량을 ‘04년 780만톤에서 ’09년 880만톤으로 증가시키고 ‘15년까지는 1,000만톤 수준으로 늘려 연근해어획량을 매년 150만톤 수준으로 유지하여 지속적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어가소득은 ‘04년 2,616만원에서 ’09년 3,400만원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13년까지는 4,500만원 수준으로 올려 도시근로자가계소득의 86% 수준까지 높이고 2009년까지 어촌관광을 위한 어촌·어항개발 통합모델 24개소 개발을 완료하는 등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소득중 어업외소득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과장 선원표, 사무관 김준곤

9. 제2회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업인들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회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2005. 9. 30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약 130여명이 참석하여 시종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속에서 평소 문서작성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경진대회 결과 우수자를 선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상(6명),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상(2명),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상(1명)을 각각 수여하였다.

그 동안 어촌의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해 2000~2003년까지 전국 31개소에 정보화 교육장과 원격화상망을 설치·운영하면서, 2005년까지 71천명의 어업인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어업인 전용홈페이지인 바다로21(www.badaro21.net)을 운영, 실시간 정보화 및 수산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전국 모범어촌계에 어촌정보사랑방 443개 설치를 지원 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휴대전화를 활용 다수 어업인에게 동시에 수산정보를 제공하는 어업인 단문자 서비스(SMS)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재해 예방 및 효율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여 왔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지도관 박영규

10.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 확대

2005년도 어업질서 확립자금에 대한 어업인들의 희망이 많아 지원규모를 2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00% 확대하였다.

이 자금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어선의 개조와 어구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이며, 적당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의 확대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업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2004. 12월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불법어선 정리가 2005. 7월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전업 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특별법과 전업자금 지원을 통해 불법어선 정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합법어선의 불법행위도 강력히 단속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회복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전길권

11. 어류양식 현황조사 최초 실시

어류양식의 시설현황, 사육량, 사료투입량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과 경영의 합리적 의사결정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어류양식현황조사가 2005년 처음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2004년 어류양식 어가는 3,241개로, 해상가두리양식 2,363개(72.9%), 육상수조식양식 705개(21.8%), 축제식양식 141개(4.3%) 순이며, 어종별로는 조피볼락 2,084개 참돔 768개, 넙치류 765개, 감성돔 707개, 농어 369개 등이다. .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2004년도 현황을 2005년에 조사한 점과 최초조사에 따른 비교자료와의 검증곤란 등으로 해양수산부내 행정자료로만 제공되었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사무관 김남웅

12. 수산통계 신뢰도 제고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은 수산통계의 현안 해결과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005. 1. 15일 양 기관간 『통계업무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고 수산통계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약정서에는 ▲통계담당 인사교류, ▲통계업무 협력위원회 설치,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T/F구성·운영, ▲양기관간 통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양기관간 사무관급 인사교류가 실시되었으며, 기관별 국장급 1인 실무자 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계업무 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2005.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각각 개최되었다.

통계업무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통계청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항목 관련 요청사항 및 수산통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양식 생산비 조사통계 개발과 어업임금근로자가구 통계개발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양기관간의 통계업무협력약정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 등 수산정책의 주요지표가 되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과의 원활한 업무협회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양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과장 조재현, 사무관 김남웅

Ⅱ.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13. 50여 년간 지속되어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근절

소형기선저인망어선 등 무허가 어업과 허가받은 어선이 조업구역·기간·방법, 사용어구 등을 위반하는 불법어업은 자원남획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업종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자원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불법어업 근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2004년 이전까지는 연 평균 1천여척이 단속될 정도로 불법어업이 심했으나, 2005년도 들어 201척이 단속되어 거의 소멸단계에 이르러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온 고질적인 동 어선을 근절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강력한 단속과 병행, 불법어선을 매입·정리하는 특별법('04.12)을 제정한데 기인한 것으로 2005년도에 2,000척(666억원)을 정리하고 2006년도에 500척(222억원)을 추가로 정리할 계획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소멸로 지난해 6월부터는 단속역량을 허가어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4년까지는 연간 2천여척이 단속되었으나, 2005년도 4천여 척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어업질서확립 추진에 힘입어 '96년을 정점으로 그간 계속 감소되어 오던 어업생산량이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는 한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주요 어획대상이었던 아귀, 낙지, 넙치 등 9개 어종의 어획량도 12.7%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근절을 계기로 업계의 자구노력과 자율감시기능이 확대되는 등 어촌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이상 불법어업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임광희
사무관 심상겸

14. 확산단계에 도달한 자율관리어업

2005년도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전년도 174개소보다 134개소(77%)가 증가하여 308개가 되었다. 이로써 2001년 시작한 이후 5년 만에 자율관리어업은 기반조성단계를 넘어 확산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등을 통하여 자율관리어업만이 우리 어업의 나아갈 방향임을 인식한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신규로 참여를 희망한 공동체 중에는 통영 바다목장지역 11개 어촌계(269명)가 광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참여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0명 이상 대규모공동체가 3개소, 지역단위를 초월한 어선어업 공동체 42개소 등이 참여를 신청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내수면어업까지 자율관리어업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경기 1개소, 충청 6개소, 전북 1개소 등 8개소가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였다.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자율관리공동체의 추진실적을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우수한 추진실적이 있는 공동체에는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자율관리 공동체의 참여정도와 추진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등급 공동체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급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새로 공동체를 구성해 출발단계의 공동체를 참여공동체(4등급) ▲규약준수 및 자원관리 착수 단계의 공동체를 협동공동체(3등급) ▲규약에 따라 성과가 가시화된 공동체를 모범공동체(2등급) ▲다른 공동체의 귀감이 될만한 공동체를 풍요공동체(1등급)로 차별화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관리어업을 성실히 이행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공동체를 선정하였다.

전국의 30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에서 우수5개소, 장려1 11개소, 장려2 44개소 등 총 60개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선정하여 총 89억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담 20%)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 총 5억원이 지원되는 우수공동체로는 석천공동체(경기 화성시), 무창포공동체(충남 보령시), 우두공동체(전남 고흥군), 구산공동체(경북 울진군) 및 황포공동체(경남 거제시) 등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그 외 2억원이 지원되는 장려1 공동체로는 11개소(인천1, 강원1, 충남1, 전북1, 전남3, 경북2, 경남1, 제주1)가, 1억원이 지원되는 장려2 공동체는 44개소(부산1, 인천1, 울산3, 경기1, 강원5, 충남4, 전북4, 전남12, 경북5, 경남5, 제주4)에 각각 지원하였다.

자료 :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김태기

15. 2015년 연근해 수산자원량 1,000만톤 달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회복을 목표로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입해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1,000만톤으로 끌어 올리고, 매년 150만톤 정도의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천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93개 어종을 대상으로 자원이 감소한 40개 어종은 회복대상종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나 관리가 필요한 40개 어종은 관리대상종으로 기타 13개 어종으로 구분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회복대상 어종에 대해서는 각 어종별로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그 결과를 심사평가해 추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인 회복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회복 목표량은 중기(2010년)와 장기(2015년)으로 나누고, 2010년까지 29개 어종에 대해 회복계획을 실시해 연간 120만톤의 어업생산량과 자원량 880만톤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11~2015년까지는 11개 어종을 추가 확대해 연간 150만톤을 생산하고 자원량도 1,000만톤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06년도에는 해역별·어종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모델 제시가 가능한 4개 어종을 선택해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대상 어종은 도루묵(동해, 일반관리형), 꽃게(서해-연평, 광역 자율관리형), 낙지(남해-무안, 소규모 자율관리형), 오분자기(제주-성산, 생태계 복원형) 등이다.

이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를 구성해 자원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원회복의 성공여부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여기서 공동으로 계획 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 자원관리, 어업조정 등에 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정부승인을 얻어 실천하는 ‘어업인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연안정착성 어종에 대한 자원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점진적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2개 이상 시·도를 왕래하는 회유성어종과 주요 상업대상종 관리에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15년까지 10년간 어업생산량은 811만 톤에서 1,263만톤으로 452만톤, 생산금액은 18조 5천억원에서 29조원으로 약 10조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비 2조 2천억원을 제외하고도 순 기대효과는 7조 7천억원에 달한다.

또 이 기간동안 어업, 유통, 가공 등 수산관련 사업에서 27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소형기선저인망 및 서해안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만으로도 연안 자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원회복 계획은 불법어업 근절을 시발점으로 산란장, 서식장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의 재생산관리 등 각종 정책의 상호 연계를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확신된다.

자료 : 어업자원국 수산자원회복팀 팀장 양동엽, 사무관 임태훈

16. 과도한 포획·채취 행위를 제한하는 내수면어업법 개정

전통적으로 내수면은 주로 어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주5일 근무제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강, 호소를 찾는 레저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유어자와 어업자간에 수면이용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마찰이 발생되고, 어족자원의 고갈 우려와 자연생태계 파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번 고갈되면 회복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는 낚시·레저인과 어업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관계를 조정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측면이나 생태환경의 보호,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 남획의 우려가 큰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역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기초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건전한 레저활동은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이 레저차원에서 행하는 유어행위까지 투망을 사용하게 할 경우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물고기까지 어획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천생태계 보전에 장애를 초래할 현실적 우려가 있어 일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한하도록 하였다.

자료 :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양영진

17. 낚시어선 및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 강화

최근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법을 2005.7.29 개정 공포하였으며, 그 하위법령을 2006.1.30일 개정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동 개정법령은 2004년도 우리부의 안전정책제도개선기획단이 마련한 소형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낚시어선 및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3톤미만 소형낚시어선의 낚시어선소유자 및 선원은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다만, 구명조끼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의 정원을 무시한 승선 행위와 승객들의 무리한 승선요구 등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는 것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전수칙 등 승선정원과 승객준수사항을 낚시어선 내의 승객 등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낚시어선 출항과 관련, 안개 등 시계불량시에는 출항에 따른 기준이 모호하여 출입항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출항을 통제해 옴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낚시어선의 출입항 제한의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이를 명확히 하였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이영직

18. 내수면 생태정보 홍보안내판 설치

주5일제가 정착되어 주말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강이나 하천 등에서 레저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내수면에서의 건전한 유어질서의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주요하천 중에서 유어객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거나, 낚시 등을 이용한 유어행위로 인하여 지역어업인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지역,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유어행위 제한이 필요한 지역 등 전국 주요 강, 하천 등 14개 수계 100개소에 물속 생태정보를 알려주는 알림판(1.8m×1.2m)을 설치하였다.

내수면 생태정보 알림판에는 그 지역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쏘가리, 은어 등과 같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물고기의 종류, 하천 이용자들이 보호하여야 할 수산동물로서 포획이 금지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는 무태장어, 가시고기, 묵납자루 등과 같은 수산동물을 일반 시민이 알기 쉽도록 칼라사진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독물, 전류 등과 같은 불법 어로행위와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종을 어획할 수 없는 기간과 잡아서는 안 되는 어류의 크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림판에 게시하고 있다.

2008년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하천까지도 확대하여 총 600개의 알림판을 설치함으로써 내수면 이용자의 하천 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강이나 하천을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양영진

19. 본격적인 모습 드러낸 통영 바다목장에 관심 집중

1998년부터 추진해 온 시범 바다목장 5개소에 대해서 2006년에 총 1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바다목장 중 1998년부터 최초로 추진한 통영 바다목장은 2005년에 48억원(총 240억원/'98~2006)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한다.

‘바다목장’이란 수산종묘생산에서부터 어획까지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통제·관리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울타리 없는 양식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해조장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종묘를 생산하여 중간육성 및 방류하여 관리하는 종합적 수산자원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통영·여수·태안·울진·북제주 등 5개소에서 유형별 바다목장 모델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까지 총 1,5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5년에 사업이 끝나는 통영 바다목장에 대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원남획성 어구사용을 규제하고, 공동생산·유통·판매와 더불어 브랜드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시설투자를 추진 중인 여수 바다목장은 2006년에 34억원(총 307억원/2001~2008)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동·서·제주 바다목장은 33억원(총 1042억원/2002~2010)을 투입, 그 동안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던 마스터플랜에 따라 본격적인 바다목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통영 바다목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2006년부터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4개소에 대해 3~5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규모 : 개소당 50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2006년도 4개소(강원·전북·경남·제주) 조성 착수(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

자료 :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이병웅

20. 정치망어업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 출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경남·전남 정치망조합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 출범식이 지난해 9월13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세망 사용 금지, 포획된 치어 방류, 자율적인 감시·감독 등 연안의 치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실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수산자원은 매립·간척, 해양오염, 남획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감소는 어업생산 감소, 어업경영 악화로 연결되어 어업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어선 감척, 수산자원 조성(인공어초, 종묘방류, 바다목장 등), 불법어업 단속, 소형기저 정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안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치어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연안어업인 정치망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연안의 치어자원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동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정치망어업의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업계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은, 남해안 정치망조합(경남·전남정치망조합)이 주축이 되어 1단계로 지난해 9월부터 특정기간 동안 세망 사용 금지, 포획된 치어 방류, 자율적인 감시·감독 등을 수행하였다.

세망 사용 금지는 멸치를 포획하는 시기를 제외하곤 세망 사용을 자율적으로 금지하여 치어를 포획하지 않는 것이며, 멸치와 함께 포획된 다양한 치어는 안전하게 방류하고, 이러한 활동의 이행에 대해 정치망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감시·감독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정한 벌칙이 부과하는 것이다.

정치망업계에서는 이러한 실천내용을 매일 기록하고, 활동상황은 자체평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실천의 증명으로 활용하고, 국민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경우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복잡 다양한 수산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산자원 이용자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어업인의 실천은 정치망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참여 어업인의 고통분담(어업손실, 어업비용 증대 등)을 전제로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수산과학원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대신에 어업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어업인의 위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남해안 정치망어업의 성공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정치성·이동성 구획어업 등 연안에서 치어를 많이 포획하고 있는 다양한 어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며, 아울러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어업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운동과 자원관리형 어업의 확대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서기관 윤분도

21. 선택적으로 포획 가능한 연안통발 어구 제도개선

연안어업의 주요 소득자원인 붕장어, 낙지를 현행 연안통발(그물코 35mm)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16~24mm로 된 불법 통발을 사용하여 붕장어, 낙지 및 여타 어종의 치어들을 포획해 왔으나, 불법 통발에 대한 단속이 진행될 때마다 어업인은 붕장어, 낙지 등 특수체형의 어종 포획이 가능한 어구 개발 또는 단속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통발을 사용하여 붕장어, 낙지 등 특수체형의 어종을 선택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선택성이 보장된 새로운 연안통발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통발어구를 살펴보면, 붕장어, 낙지가 포획될 수 있도록 그물코를 22mm로 축소하는 대신에, 통발의 깔대기 입구 둘레를 140mm 이하로 설정하여 붕장어, 낙지 등 특수체형의 어종만 들어가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수산과학원의 어획 성능 실험을 기초로 어구의 성능 및 현장 어획성능 실험을 거쳐서며, 붕장어 통발어업인, 낙지 통발어업인, 낙지 연승어업인 등 관련 어업인의 의견수렴은 물론 어업인간의 갈등도 해소한 새로운 연안통발 어구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과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동 통발어구는 현재 개정중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반영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연안통발어업인은 기존의 그물코 크기 35mm 통발을 사용하든지, 통발의 깔대기 둘레가 140mm이하이면서 그물코 크기는 22mm인 통발을 포획어종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안어업에 있어 통발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어구·어법이었으며, 연안자원의 감소로 인해 중요 연안어업의 소득자원인 지금 붕장어와 낙지를 정부에서 과학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은 10여년이 넘는 연안어업인의 숙원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모두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어업관리정책의 대표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서기관 윤분도

22. 수산자원관리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2005. 11. 21일부터 『수산자원관리 포털시스템(www.greensea.go.kr)』 운영을 개시하여, 수산자원관련 정보를 어업인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일본·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의 조업 실적과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 소진실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수산자원관련 자료를 지도에 표시한 GIS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강점으로, 연근해 및 일본·중국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역별 인공어초 시설현황도 확인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EEZ 조업관리 통합 정보화 시스템”을 보완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EEZ입어 신청 관리 및 어선별 소진량 관리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대민서비스가 향상되었다. 또한 수협외 EEZ조업시스템 및 불법어업관리 시스템 등과 상호 연계하여 허가사항 변경, 불법조업사실 확인 처리 등을 원활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시행하는 한·일간 세부 어종별 입어관리 체계에 완벽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포털사이트를 계속 발전시켜 어업인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TAC할당을 신청하고 허가 진행사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김태기

23.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예정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었던 바닷가 주변지역이 대폭 해제될 예정이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시·도에 통보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지역의 육지면적 1,243km²(376백만평) 중 약 76%인 940km²(285백만평)가 해제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마련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지침에 의거 해당 시·군에서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동안 주택 신축은 물론 음식점, 숙박시설 등 각종 개발제한 행위와 일부 지역의 과도한 지정 등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해당 토지의 적성과 용도에 맞게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조정기준 적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 지역 주민 불편사항이 조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2~3월 중에 시·군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5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추진상황 파악 및 현장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시·군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건교부로부터의 협의 요청시 조정기준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신속한 검토로 조속히 해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장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그 인근 해역에는 어장정화사업, 종묘방류사업 등을 우선 실시하여 수산자원의 장기 지속적인 안정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강준석, 서기관 김상규

24.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실효성 제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까지 734백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6년에 108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회복계획과 연계하여 방류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사업비(백만원) : ('01) 1,185 → ('03) 6,343 → ('05) 8,989 → ('06) 10,779

아울러 종묘방류 대상품종도 부가가치가 높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품종을 다양화('05년 30종→'06년 34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다양화 주요품종 : 돌돔, 감성돔, 참돔, 능성어, 황점볼락, 해삼, 자주복, 동갈돔돔, 붉은쏨뱅이, 말쥐치 등

2006년부터는 종묘방류 사업추진시 입찰에 참가하는 민간종묘생산업체에 대해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청 등과 수산종묘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 점검제를 실시하여 우량종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수산종묘방류로 수산자원의 다양성 유지는 물론, 자원증가를 통한 어획증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방류품종별로 자원증가 효과와 정기적인 어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종묘방류 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이병웅

25.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도입

수산자원회복에 기본목표를 두고, 자원남획, 조업분쟁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높은 자망, 통발어업 등의 어구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길이와 개수)을 제한하고, 어구의 부설위치를 나타내는 표지에 어업자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어구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5. 7월 해양수산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어구실명제는 어업인 홍보·계도 기간을 고려 2006. 1. 1부터, 어구사용량 제한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구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 자망어구는 2006. 7. 1부터, 통발어구는 2007. 7. 1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2006년에는 연근해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어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실명제 및 사용량 제한의 실효성 제고와 어구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최용석

26. 연안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한 선복량 제한기준 설정

2005년 12월에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종류와 허가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연안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한 선복량 제한기준을 설정하며,

연근해 자망·통발·안강망어업의 어구사용량을 제한하고 이들 어구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005.7.1일 공포, 시행하였다.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두리양식어업에 패류와 해삼, 축제식 양식어업에 어류와 해삼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면허어업 어장면적의 한계를 어종별로 60ha까지 확대하였으며,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법령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양식물과 종묘의 종류,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수산자원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총톤수 3톤미만의 어선을 3톤까지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와 총톤수 3톤 규모 이상을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톤하고자 하는 톤수이상의 동종어업의 다른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 증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중 안강망어업, 통발어업,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량을 제한하였으며, 동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그 부설 위치에 어업자 등의 실명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이영직

27.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입찰제 성공적으로 정착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994년부터 추진 중인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2004년까지 근해어선을 위주로 감척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5년부터는 2단계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연안지역 수산 동식물 산란·서식지 보호를 위해 연안어선 6,300척을 감척하기로 하였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대상척수가 많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매매에 의존하고 있어 어업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되고, 민원발생 소지도 많았으나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원용하여 경쟁에 의한 ‘저가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입찰제 도입을 위해 여수대학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보고서와 국가계약법을 참고하여 입찰요령을 개발하고 250여척을 대상으로 조사된 어업손실액을 실제 어촌현지에서 거래되는 어선의 가격과 비교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2005년 7월에 ‘2005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입찰제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어업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책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으로 1,043명의 어업인이 참여하여 2.7:1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중전의 개별어선평가방식에 의하면 사업대상자 선정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입찰에 의해 신속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손실액을 결정함에 따라 민원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결과 당초 감척 목표척수인 390척을 80%이상 초과한 709척을 감척하여 개별어선평가방식에 비하여 어선 1톤당 4,822천원을 절감하는 등 총 1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감척 척수를 늘려감에 따라 2008년까지 6,300척 감척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최덕부

28.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실시 합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고등어, 전갱이 등 10개 어종에 380천톤으로 결정하였다.

어종별로 보면 ▲고등어 15만5000톤 ▲전갱이 1만9000톤 ▲정어리 5000톤 ▲붉은대게 2만1000톤 ▲대게 1000톤 ▲개조개 5100톤 ▲키조개 2440톤 ▲제주소라 1610톤 ▲꽃게 4000톤 ▲오징어 166,000톤이다. 이중 자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고등어, 대게, 개조개, 소라 및 꽃게는 할당량이 축소됐고, 자원상황이 양호한 전갱이, 붉은대게 및 키조개는 할당량이 증가했다.

이번 방침 결정의 특징은 오징어에 대한 TAC제도 실시계획이다. 오징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산자원으로서 자원보호와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TAC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전국 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대표자가 “전국오징어생산자연협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2006년 7월부터 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어업인 스스로 생산업종간 갈등을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다른 업종에서의 고질적인 분쟁 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TAC제도의 조기에 정착을 위해 TAC를 할당받지 않은 어업인은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총허용어획량 고시를 개정하고, 어획량 보고 및 판매장소 지정제 등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TAC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는 어업인이 초기에 경영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06년에는 수산발전기금 170억원을 어업규모에 따라 3%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김태기

29. 첨단 어업지도선 2척 확충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와 한·일/한·중 어업협정발효('99.1.22/'01.6.30)로 우리 관할수역이 약 4배 확대(영해 88천km → EEZ수역 362천km)되는 등 급변하는 국제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측 EEZ수역내 어업자원의 관리강화하고 연근해어업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국가지도선 2척(500톤급)을 건조하여 취항시켰다.

국가지도선 건조는 수산진흥종합대책에 의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서 그간 2003년 3척, 2004년 2척을 건조하여 취항시킨데 이어 2005년말에 건조공사를 완공한 2척을 추가 확보하므로써 국가지도선은 총 32척을 보유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지도선은 38척까지 확충하여 대화퇴 등 원해출어선의 안전조업지도, 우리 EEZ내 국내외 어선의 감시·단속활동, 연안해역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기존 노후지도선도 년차별로 첨단 어업지도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선박 안전성 확보 및 국가지도선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이번에 건조하여 취항하게 되는 국가지도선 2척은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각각 1척씩 배치되며, 주요제원은 길이 62m, 너비 9m, 깊이 4m이며, 최대속력 20노트인 500톤급으로 기존 국가지도선에 비해 충분한 기동성, 복원성, 안전성 및 내파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치추적레이더, 속력 45노트 급의 고속단속정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의 감시선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승무원의 복지공간까지 확보하는 등 전천후 국가지도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심상겸

30. 바다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바다쓰레기에 대하여 ▲정화사업 ▲관리체계 ▲기술장비 보급 등으로 구분한 체계적인 바다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정화사업으로는 77억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연근해 해역에 방치된 페어망 등 폐기물3,052톤을 수거 하였으며 어업인이 조업중 건져 올린 폐그물을 항, 포구로 가져올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쓰레기 수매사업을 시행하여 2,75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또한 국민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방치된 도서지역 및 갯벌지역에서도 정화사업을 시행하여 방치 쓰레기 2,293톤을 수거하고 매주 금요일 바다사랑실천의 날을 통하여 바닷가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05년중 총 2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연안에서 68,795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함으로써 바다환경 개선에 크게 노력하였다

육상쓰레기 해양유입량을 저감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05. 7월에는 전국 5대강 유역 소재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바다쓰레기 관리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하절기에 바다쓰레기의 폐해를 주제로 한 공익캠페인을 제작하여 방영(KBSTV)하고 기획 시리즈물을 다수의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크게 강화하였다.

페스티로폼감용기를 개발, 남해안 연안에 소재한 시·군에 8기를 보급하여 총 18기의 감용기가 설치 운영됨으로서 페스티로폼 등으로 오염된 연안경관을 보호함과 동시에 종래 소각처리한 페스티로폼을 재생하여 자원으로 재 활용하고 있다.

또한 1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시설을 최초로 웅진군 관내 소청도에 설치 추진하여 시설 가동시('06년 상반기) 도서지역에 방치 내지 유기된 바다쓰레기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에도 바다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과장 유정석, 사무관 천재홍

Ⅲ. 안정적인 연근해 어업기반 마련 및 양식산업의 육성

31. 2006년도 한·중 입어협상 타결

해양수산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12월 7일, 중국 청도에서 중국 농업부 어업국장과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2006년도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상호입어 규모, 조업조건 등 양국간 어업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우리어선의 내년도 중국EEZ 입어규모는 1,600척 68,000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중국어선은 금년보다 125척 4,600톤이 감축된 1,975척 72,900톤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감축된(125척) 중국어선중 어획강도가 높은 타망어선(100척)을 주로 감축시키는 한편 우리측은 자망 및 낚시류 어선 36척을 추가 확보했다.

그리고 양국간 입어규모의 균형달성을 위해 2009년까지 중국어선의 입어척수를 1,800척, 어획할당량 70,000톤 수준으로 감축시키기로 하였으며, 2010년 이후의 입어규모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5년부터 2,000척 수준에서 대체적 균형을 이룬다는 2001년도 합의의 틀을 깨고 향후 실질적 균형을 위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우선 2006년에는 양국의 관계 전문가 교환방문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키로 하여, 동수역에 대한 자원관리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공동자원관리를 위한 첫 걸음을 딛게 되었다.

특히, 이번회담을 통해 중국측에게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 대책을 강하게 촉구하여 양국공조 단속체제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어선은 다음연도 우리해역에 대한 입어 배제 등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06년 상반기부터 양국 어업지도 단속공무원의 상호방문 및 어업지도선의 상호교류 등 어업협력 및 우호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과장 박규호, 사무관 이상묵

32. 2006년도 한·일 어업협상 타결

한·일 양국은 2005.12.22일 서울에서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일본 농림수산업 수산청 차장이 수석대표로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2006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총 어획할당량을 1,050척과 63,500톤으로 합의했다.

2006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양국이 각각 지난해보다 3,500톤씩 감소한 가운데 우리측은 연승어업 5,585톤,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032톤, 선망어업 35,310톤, 오징어채낚기어업 8,700톤, 꽁치붕수망어업 7,000톤 등 우리 주력업종의 어획할당량은 지난 해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어종별 어획할당량은 갈치 2,080톤, 고등어류 23,385톤, 꽁치 7,000톤, 살오징어 8,650톤, 전갱이 3,500톤, 가자미류 1,300톤 등이다.

특히 어획할당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됐던 연승어업에서 지난해보다 500톤 초과 확보했으며, 갈치의 경우 지난 해 2,050톤 보다 30톤 증가한 2,080톤을 확보해 어업인의 우려를 해소했다.

그리고 선망어업에 있어서의 삼치 개별 어획할당은 조업특성과 맞지 않음을 지적, 지난 해 500톤에서 올해는 기타로 분류해 선망어업의 조업특성을 반영했다.

한편, 조업조건에 있어서도 선망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던 어획대상어 종중 1개 어종이 어획량 상한에 도달하면 전체 조업을 중단토록 되어있는 '어종 어획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주력업종의 조업여건 개선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상대방 EEZ 진입시간 보고가 현행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완화해 우리 어업인들은 신속한 어장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어업자 주소변경은 당초 일본으로부터 허가증 재교부를 받아야 했으나 이는 단순사항 신고로 같음토록 설득해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내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무선국에 통보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증 재교부 기간동안 조업 중단(1개월)으로 어업손실을 막도록 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은 업종별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협상에 있어서 우리 연승어선에 대해 오도열도 주변 조업기간 30일 단축, 조업금지수역 확대, 어구부설 규제 도입 등 조업규제의 대폭적인 강화를 강하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조업조건 변화는 한·일 양국의 어업 협력 관계를 해하는 조치라 강력히 반발하여 조업기간 단축을 8일로 최소화하고 기타 문제는 장기적 기본 틀에서 협의하도록 유도해 오히려 선망어선의 1어종 어획상한제 폐지, 어장입역시간 단축, 어업자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갈치할당량 확대 및 갈치할당량 3년간 보장과 앞으로 3년간 오도열도 주변 추가 조업규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2월15일까지는 어선의 명부만을 상대국에 통보하면 조업허가증 없이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한 뒤 2월16일부터는 정식 조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조업키로 했다.

올해 일본 EEZ 조업조건 변경사항 등 합의결과를 지난 1월 어업인 및 업계, 관련 공무원, 수협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영상설명회 및 전국 현지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과장 박규호, 사무관 최경삼

33. 한·중 어업지도단속 공조강화

한·중 양국은 2005. 9.27(화)~9.28(수) 제주도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장과 중국 농업부 어정지휘중심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2005년도 한·중어업지도단속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어선의 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해상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기로 하고, 2005년도에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과도수역에 대한 공동순시가 동 수역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2005. 6. 8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수산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하기로 합의하였다.

먼저, 2006. 5월 하순에 양국 어업지도단속공무원이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교차승선 교류를 양측이 각 1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호 교차승선 순시수역은 서해특정금지구역과 양자강보호수역으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6. 10월에는 양국 어업지도단속공무원이 지도단속기관을 상호 방문기로 하고, 양측이 각 1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항은 양국 지도단속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중국어선의 우리수역에서의 위반조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전길권

34. 한·중 양국, 서해접경수역 중국어선 침범방지 5개항 합의

한·중 수산당국은 '05. 6. 8 북경에서 제3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주요 수산현안 및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해양수산부 차관보, 중국 농업부 어업국장(대행)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지난해 제2차 수산고위급회담 결정사항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양식분야, 지도단속, 자원연구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간 현안사항인 서해접경해역에서의 중국어선 침범조업 방지를 위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외국수역에서의 범칙어선 처벌에 관한 중국 어업법의 조속한 개정, 서해특정해역 서쪽 한계선에 대한 중국 지도선 배치강화, 양국 단속 요원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지도기관 상호 교환방문, 단속선간 상대방 주요항구 친선방문, 중국측 어업인에 대한 지도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동 수역에서의 점진적인 조업분쟁 해소에 대한 전망이 밝다.

한편, 동해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입어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중국어선 입어로 인한 남하성 회유 어족자원의 감소, 동해지역어론 등 동 수역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어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법입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입어허가 및 불법어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 주도록 중국측에 요청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지난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국간 협력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이행을 위해 관계국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최근 인도양참치위원회 및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등 지역수산기구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참치 연승어업에 대한 해상전재 제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참치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다자분야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과장 박규호, 사무관 이상묵

35. 한·중·일 3국 수산단체장 첫 협의회 개최

한·중·일 3국 수산단체장은 지난 1일 오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처음으로 민간어업협력 협의회를 갖고 공동조업수역에서의 어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바다를 둘러싼 3국간 조업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 바다의 날을 계기로 한·중·일 3국 수산단체장들은 첫 협의회를 갖고 △관련수역에서의 어업자원 보호 및 관리 △포경관련 공동대응 △어업연수생 송출입 △참치의 중국시장 개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3국 수산단체장들은 한·중·일 민간어업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매년 1회 윤번으로 협의회를 갖고 해상조업질서 유지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어업자원 보호·관리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협의회는 내년 중 일본에서 개최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산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중국에서는 중국어업협회장, 일본에서는 대일본수산회장 등 3국 민간 수산단체장들을 포함, 모두 30여명의 어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과장 박규호, 사무관 김대수

36. 동·서해 접경지역 어장확장

동·서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방상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56km²에 달하는 어장을 확장하였다.

서해5도 주변어장은 지난 5월 21일 서해 NLL과 인접한 연평, 백령도 주변어장 등에 대하여 1,161km²에서 1,315km²로 총 154km²를 확장하였으며, 동해북방어장은 지난 11월 2일에 102km²에서 2배인 204km²로 확장하였다.

동·서해 접경어장을 확장함에 따라 남북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장축소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해온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정영훈, 서기관 정진혁

37. 연근해어업의 구조 대폭 재편 및 업종 통폐합

우리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어업관리 등을 위해 이원화된 어업분류 체계를 일원화하고, 연근해·원양어업 등 71개 업종을 53개 업종으로 통폐합하는 등 현행 어업구조를 대폭 재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동 재편방안에 따르면 연안어업은 8→8개, 근해어업 21→18개, 원양어업 16→12개, 구획어업 17→8개, 신고어업 5→3개, 종묘생산어업 4→2개로 조정되고, 특별관리어업으로 2개 업종이 신설된다.

또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어선규모에 따른 분류기준도 현행 8~10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여 연안과 근해어업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일선 행정기관과 어업인간에 논란이 되어 왔던 어업별 어구·어법에 대해서는 학술적 이론과 어구형태, 어선규모, 조업방식 등 어업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여 어업별 어구·어법의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최용석

38. 연평도 꽃게조업시기 3월 1일로 앞당겨 조정

연평도 꽃게의 봄철 조업시기를 3월 1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지난해 3월 20일에서 20일 앞당겨진 것으로 인근어장과 조업시기가 같도록 현지 어업인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인근 덕적도 서방해역과 조업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선원수급 및 꽃게 가격 등에 불리한 입장이었던 연평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자율적인 조업질서 확립업무를 담당하는 T/F를 운영하여 출어선의 조업구역 이탈 방지, 꽃게 조업위치 확인 및 어획량 파악 등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조업현장의 중국어선 퇴치 및 우리 어업인을 지원하고 조업구역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꽃게 주 조업시기에 시·군 및 국가 어업지도선, 해경정 등을 중점 배치하여 안전조업지도에 만전을 기하였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정영훈, 서기관 정진혁

39. 전복가두리에 다시마·미역 복합양식 등 면허제도 개선

수산업법 개정(2004.12.31)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면허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 외해 중층가두리양식 신설 및 패류(전복)가두리에 다시마·미역 등을 복합양식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환경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이미 면허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동시갱신 또는 어장정비 실적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사이의 거리를 제한적으로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05년 3월3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개정된 규칙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품종전환 및 대체어장개발 등이 가능함에 따라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강준석, 사무관 주두만

40. 물고기 진료시대 개막

2005년 2월 26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한 제2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면허시험에 총 160명이 응시하여 그중 43명(남자 24, 여자 19)이 합격했다고 3월 4일 발표하였다.

수산질병관리사는 2004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수산동식물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가이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자는 신원조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받아 물고기 병원을 개설하여 수산동식물을 진료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면허시험은 2차례 실시되었으며, 면허를 취득한 자는 83명이며, 제1호 수산질병관리원이 김춘섭·김진숙 부부에 의해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2005년 3월초에 개설되었으며, 이들 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수산질병관리원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진료, 처방 등 수산동식물의 건강을 담당하게 되며, 수산용의약품도 취급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어류의사”인 셈이다.

앞으로,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수산동식물병 예방과 투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강준석, 사무관 김금조

41. 배합사료 직불제 활성화

어류양식어업의 먹이로 냉동콩치·자어 등 생사료 사용에 따른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 방지와 경쟁력 있는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2004년부터 배합사료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사료에 비해 성장속도, 비만, 섹택 및 육질 등이 떨어져 어류양식 어업인들이 배합사료 사용을 기피하여 직불제 참여가 부진하였다.

그러나 산·학·연 공동연구로 개발한 배합사료 생산·공급, 배합사료 지원단가 상향조정, 시험어장 운영, 일정기간 생사료 허용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하여 직불제에 참여하는 어업인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 배합사료 지원실적 >

(단위: 어가, ha, 백만원)

2004년(A)			2005년(B)			증감률(B/A)		
어가수	지원면적	지원액	어가수	지원면적	지원액	어가수	지원면적	지원액
358	148	2,436	621	338	6,742	증73	증128	증177

2006년에는 2005년도에 신청한 어업인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확보한 101억이 대부분 소진될 것이 예상되어 금년에는 신규로 신청하는 양식어업인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강준석, 사무관 정동기

42. 수산동물의 질병 방역체계 구축

수산동물의 질병에 대해 국가단위의 질병방역 및 검역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안을 제정·추진 중에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 주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과 양식어업인간 방역기능 조정 및 지원강화, 질병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국제법규간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마련, 질병관리를 위한 정부의 방역서비스 제공, 약품의 개발·공급, 백신사업 지원 및 살처분 보상 근거 마련, 외국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제도 보완 등 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동물질병을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동물질병 관리대책 수립·시행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 등 종합적인 수산동물 질병예방 기술개발계획 수립·시행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동물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동물의 격리와 수산동물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정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살아있는 수산동물, 사료, 물 등을 국내에 반입시 수산동물질병 감염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함

이 법이 시행되면 수산동물의 이동제한, 격리, 살처분 등을 통한 질병 확산 방지로 피해절감 및 수서 생태환경 보호와 수산동물의 생산이력 제공과 약품사용제한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06년도에 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강준석, 사무관 정동기

43. 외해 수증가두리 양식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

제주도가 신청한 바 있는 외해 어류 가두리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였다. 외해 가두리양식 시험어업은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외해 수역에서 2005년 5월부터 3년 동안 10ha(수심 약 50m) 규모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와 노아 외해양식영어법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번 시험어업에서는 미국 NOAA(국립해양대기청)에서 개발된 시설과 장비를 도입 및 연구진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외해 가두리시설과 양식방법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외해 가두리양식어업은 적조,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외해의 청정해역에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양식함으로써, 어업재해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를 자동급이 방식으로 공급하고, 유영성 고급어종인 돌돔·능성어·다금바리 및 다랑어 등 부가가치 높은 어종을 양식할 수 있게 되어, 수입대체 효과와 가격 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어업을 실시한 후에는 양식어장으로 개발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새로운 양식방법 개발과 양식어종의 다양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내만의 가두리양식어장을 외해의 청정해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연안의 어장환경 회복을 도모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양식대상 어종의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강준석, 사무관 주두만

44. 환경보전과 경비절감을 위한 굴 껍질 자원 재활용

남해안 굴 양식장 주변에서 알굴 생산후 발생하는 껍질은 연간 27만여톤이며, 대부분 비료원료·채묘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처리되지 못한 껍질은 바닷가에 야적돼 경관훼손과 냄새 등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굴 껍질 처리에 따른 어업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농림부·환경부·전남도·경남도 및 굴수협과 협의를 거쳐 2005년 10월 6일 굴 껍질처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굴 껍질로 만든 폐화석 비료는 산성토양개량 효과가 높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조하여 정부지원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용 공급물량을 확대(15,000→35,00톤)하고 골프장 등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굴 껍질은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해 왔으나 환경문제 등으로 지난 1994년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각입자의 크기, 염분농도 등 부산물비료로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고 농림부·환경부와 협의해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한 후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퇴비로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깨끗하게 처리된 굴 껍질은 양계농가의 닭사료 칼슘첨가제, 물 정화제 등 활용도를 높이고, 2006년도 착공예정인 시화지구 멀티테크노벨리 조성공사에 시범적으로 2만4,000톤을 공급하는 한편, 향후 항만·어항공사 및 매립공사의 건축재로 재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남해안 일원에 처리되지 못하여 야적중인 굴 껍질 처리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투입, 2만여톤을 수거처리하고 앞으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오는 2008년경부터는 굴 껍질이 훌륭한 재활용 자원으로 변신해 연안오염 방지와 냄새·경관훼손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굴 생산 어업인과 가공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강준석, 서기관 김상규

45. 적조피해 최소화

2005년 7월 19일 남해안에 발령한 적조주의보를 58일 만인 9월 14일을 기해 전면 해제하였다.

2005년도 적조는 최근 10년간 가장 빨리 발생하여 전남 완도에서 경남 거제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으로 확산 진행되었고, 대마난류의 이른 확장으로 연안수와의 수온 전선대가 일찍 깨짐으로써 예년보다 빨리 발생했으나 동해 남부해역의 강한 냉수대 형성으로 동해안까지 세력이 확산되지는 않았다.

적조생물은 매년 우리나라 남해안에 발생하는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sp*) 종으로, 크기는 중간 정도의 규모(최대밀도 2만5000개체/ml)이었다. 8월 하순경에는 전남 장흥~완도해역에서 유해성인 차토넬라 적조가 혼합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한 수온약층 소멸로 소강상태이던 적조가 다시 발생하기도 하였다.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해경, 시·도(시·군) 등 유관기관과 어업인들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민·관·군 합동으로 체계적인 예찰·예보 및 방제를 실시하였다

또 새로운 적조피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는 적조생물 차단막 설치, 적조피해 직전 사육어류 방류, 안전해역으로의 가두리어장 이동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벌였다.

적조피해는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등 65개소의 해상가두리 및 육상양식장에서 사육 중이던 돔류, 우럭 등 160여만 마리가 폐사, 약 1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적조가 장기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어류 총 양식량 77,000만마리의 0.02%, 최근 5년간 연피해량의 30%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 것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조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민·관·군이 총력적으로 방제한 결과로 평가된다

자료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강준석, 사무관 김금조

46. 피조개 종묘 관세감면, 양식업계 부담 경감

피조개는 70년대부터 양식기술의 발달로 경남 진해만을 중심으로 양식이 시작되어 80년대 이후에는 전남 등 타·시도에서도 대대적인 양식으로 어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1996년에는 수산물 중 단일 품목으로 1억\$을 수출하여 1위를 차지한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 품목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말부터 연근해 해양여건 악화 등으로 피조개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여 대일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내산 피조개 종묘 생산부진으로 종묘 확보애로, 종묘 가격상승 등에 따라 중국에 국산 피조개 모패를 반출,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등 피조개 종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피조개 인공 종묘 수입시 20%의 관세 부과가 우리 어업인들의 피조개 수급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감면할 경우 피조개 종묘 부족현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피조개 국내 양식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대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한 결과 2006년 1월1일부터 관세면제 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조개 종묘 관세면제는 어업인들에게 연간 약 2억원의 수입 부담금을 경감시켜 어업인들에게 수출에 대한 활력소를 심어주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되며 대일본 수출 또한 다시 크게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현재 수산물 중 관세면제 물품은 총 7종으로 양식용 실뱀장어, 종패용 진주 조개, 진주양식용 핵, 종패용 굴 치패(유생 포함), 종묘 개량용 우렁챙이의 어미 및 종묘, 양식용 돔 및 농어(수정란 포함), 피조개 종묘이다.

※ 피조개 수출 : ('96)1.1억\$ → ('02) 29백만\$ → ('03) 26백만\$ → ('05)19백만\$

자료 :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 박호근, 사무관 박환준

IV. 활력 있는 어촌건설

47. 105개 국가어항 안전관리체계 구축

2005년 이전까지 지방청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 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 오던 105개 국가어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2006년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

그동안 어항시설물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업무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기 준공된 어항의 정비 및 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어항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보수, 보강 주체와 안전점검업무 주체를 분리 시행할 수 있도록 105개 국가어항 시설물에 대하여 2005년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안전점검(수중조사 포함)을 시행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05. 12월 어촌어항법이 제정되어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어항시설 점검을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어항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준공되어 가장 오래된 노후 어항 4개소에 대한 수중조사를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기존의 육안 및 측량장비에 의한 안전점검 때 발견하지 못했던 수중의 취약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이번 안전점검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어항시설물의 적기 보수·보강계획을 수립 할 수 있어 태풍 및 각종 재해로부터 어항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김남훈, 사무관 김규섭

48.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1단계사업(160개 권역/총사업비 5,432억원)의 마무리를 위한 잔여사업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05년도 말 기준 135개 권역을 준공하여 84%의 사업 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잔여사업 25개 권역에 대하여는 '07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05년도에는 23개 권역(계속사업 5, 신규사업 18)을 대상으로 32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6개 권역을 준공하였으며 17개 권역은 '0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잔여사업(8개 권역)도 '07년도까지 224억원을 투자하여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주요시설은 주로 방파제·물양장 등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산지가공시설 등 소득기반시설,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어업인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산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어촌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제2단계 어촌종합개발계획(65개 권역/총사업비 3,250억원)은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65개 권역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중 16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06~'07)하고, 그 결과에 따라 '07년도에 8개 권역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나머지 49권역에 대하여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에서는 어촌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어촌관광 인프라도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김남훈, 사무관 박승준

49. 부산 대변항 등 5개 다기능어항 본격 개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다기능 어항으로 선정된 5개 어항에 대한 ‘다기능어항 개발 기본계획용역’을 05. 12월 완료하고 '06년도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 개발된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부산 대변항의 경우 지역의 대표적 수산물 멸치를 이용한 축제 광장과 대변항을 찾는 방문객들이 바다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거제 지세포항의 공간계획은 국도 및 어업민속전시관과 인접한 지구는 마리나 시설, 가족호텔, 수산물판매장, 친수광장 등을 배치해 해양레포츠지구로, 방과제와 연계된 지역은 전망낚시터, 주차장, 테마광장 등을 배치해 낚시테마지구로 계획됐다.

서천 흥원항의 경우 춘장대 해수욕장 및 지역축제 등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리나 및 숙박시설 등을 유치토록 하고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낚시잔교, 수산물판매시설, 부잔교식 물양장 시설 등도 배치토록 하였고,

부안 격포항은 채석강 주변을 친수시설로 정비하고, 인근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낚시 체험장, 함상테마파크, 다목적광장 등을 시설하도록 하였다.

여수 국동항은 국내 최대규모의 위판장을 보유한 수산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수산물 관련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또 지역민을 위한 친수공간 및 수변 산책로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 숙박·상업시설 등도 계획됐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격포항과 흥원항은 내년 부터, 대변항, 지세포항, 국동항은 2008년부터 국비를 투입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준공될 경우 어촌관광 활성화에 큰 전기가 될 것이다.

자료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김남훈, 사무관 최재학

50.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어항 완공률 77%로 제고

그간 어항개발은 열악한 예산사정과 분산투자로 개발이 장기화되어 투자편익 감소, 공사비 증가, 태풍피해 가중 등으로 완공률이 저조했으나 '05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로 전환하여 완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05년 투자항수를 소요항수 66개항 중 53개항으로 13개 축소 조정 하였으며 집중투자를 위해 유지보수 및 정비확장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 예산과다 소요항, 투자우선순위 후순위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어항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전남 풍남항등 3개항을 완공하는데 69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05년에는 경남 매물도항등 6개항에 206억원을 투자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피해가 극심한 부산 대변항, 전남 소흑산도항, 강원 안목항에 193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유지보수대상항도 '04년 28개항 621억원에서 2005년에는 27개항 470억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분산투자 및 완공률 제고를 위해 신규로 어항 정비확장이 필요한 경북 죽변항등 6개항에 대해 투자를 유보하였다.

그 결과 2005년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6개항을 준공하여 국가어항 완공률을 71%에서 77%로 제고하였으며 피해가 극심한 전남 소흑산도항등 3개항에 대해 준공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으로 재해방지를 위해 긴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지보수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미완공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2008년까지 추가로 20개항을 완공하여 완공률을 96%로 제고시켜 어선안전수용은 물론 어항개발 효율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자료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김남훈, 사무관 최재학

51. 어촌관광 3개 모델 24개소 개발 추진

앞으로 어촌은 어항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시설 위주의 산업공간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상쾌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도시민의 방문을 촉진시키고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촌관광·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어촌 개발을 목적으로 △어촌과 어항이 어우러진 '어촌어항 복합공간 창출' △어항의 기능을 대폭 보완한 '다기능어항개발' △어촌관광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3가지 모델을 기본으로 한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에 의거 2004. 12. 15 사업대상지 24개소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3가지 어촌관광 기본모델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비를 전면 재편하여 △어촌·어항 복합공간(7개소) 조성에 1,079억원 △다기능어항(6개소) 건설에 2,957억원 △어촌관광단지(11개소) 조성에 696억원 등 총 4,732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남 마량항(어촌어항 복합공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투자에 들어간데 이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모델별 기본설계 11개소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어촌어항복합공간 2개소(정자, 양포항)와 다기능어항 5개소(대변, 흥원, 격포, 국동, 지세포항), 어촌관광단지 4개소(무창포, 대진, 대송, 전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람선·낚시어선·요트 등 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과 관광안내소, 주차장 등 편의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어촌관광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이 준공될 경우 어촌지역에서 체험, 레저, 요식, 경관감상 등 어촌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어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김남훈, 사무관 박승준

52. 어항법을 대체한 어촌·어항법 제정시행

그 동안 2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기존의 어항법을 대체하는 어촌·어항법이 제253회 임시국회 회기 중 '05. 5. 3 본회의 의결을 거쳐 '05. 5. 31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제정으로 '05. 12. 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의 어항법은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가 주목적인 반면 새로이 제정된 어촌·어항법은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이외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할 것이다.

어촌·어항법의 주요정책 추진체계를 보면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촌종합개발계획과 어항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 어촌·어항법 제정의 성과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했다는 것과 함께 어항을 관광·레저기능 등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점, 해역별 특성 및 어선세력을 기초로 합리적인 어항지정기준을 마련한 점, 어항관리업무를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이양한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어촌·어항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어항개발 및 관리정책의 혁신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로써 '06년도부터는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촌·어항 개발이 가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3대사업(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다기능어항 건설,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이 탄력을 받아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김남훈, 사무관 김병섭

53. 여름철 어촌관광객 4천만명 돌파

2005년도 수산부문의 정책목표인 “잘사는 수산업인, 살기 좋은 어촌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 '04. 5」의 일환으로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어촌관광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어촌관광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40시간 근무제 정착 등으로 도시민들에게는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업인들에게는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4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2005년에는 다양한 어촌관광 수요 창출을 위하여 확대시행하고 내실화하였다.

우선 한국어촌어항협회 주관으로 2005. 5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541명을 대상으로 모집대상을 일반도시민 뿐만 아니라 언론인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도 실시하였으며, 서해에 한정되었던 대상지역을 동·남해로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인터넷 다음 카페 여행동호회 “일상탈출”의 11회 393명을 비롯 「인터넷 포털사이트 퀴즈당첨자 어촌으로 여름휴가 보내주기」 등 여름철 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3대 캠페인 185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자동차로 떠나는 남해안 어촌 찾아가기」 행사(6.4~6.6)시 2,012여명을 대상으로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어촌관광 붐 조성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2005년 7-8월 휴가기간 중 어촌 방문객수는 4,311만 9,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기간 3,730만 2,000명보다 15.6%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등 어촌관광 붐을 조성한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자료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김남훈, 사무관 김병섭

54. 도시와 어촌의 상생을 위한 교류

최근,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장축소 등으로 어업생산량이 감소되고, WTO/DDA 및 FTA협상 등에 따른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등 국내외적인 수산업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촌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와 어촌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5년 5. 24 어촌사랑 선포식을 갖고 100사 100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어촌사랑 선포식을 계기로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의 물꼬를 트고 교류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통한 「어촌사랑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회사와 어촌계 간의 자매결연 교류활동 프로그램으로 사측에서는 자매결연 어촌계에서 직장행사(MT 등) 실시, 사내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자사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어촌계에서는 자매결연 회사에 저렴한 수산물 생산 공급, 도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결연기업의 상품구매 및 사회공헌 활동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양자간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 체결된 100사100촌에 대하여는 교류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 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제1회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상”을 제정·포상하고 도시와 어촌의 교류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대 정유사 및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유도하여 '05년말 현재 214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2009년까지 1,000사1,000촌을 목표로 도시아파트의 1부녀회 1촌 등으로 확대하여 매년 200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시와 어촌간 상호 이해증진과 상생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김남훈, 사무관 김병섭

V. 안전한 수산물 의 안정적 공급

55. 바다도 위생등급 시대 개막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수산물 생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등급화 사업”이 추진된다.

전국의 해역을 60개로 구분하여 2005년부터 매년 15개 해역에 대하여 수은, 납, 카드뮴, 생균수, 대장균 등을 조사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생산해역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을 금지함으로써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1차년도 조사해역은 강원도 강릉연안을 비롯하여 경기 화성 연안, 경남 고성과 거제 연안, 전남 순천만, 전북 곰소만 등 15개 해역이며 나머지 45개 해역의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60개 해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기준과 등급화도 설정할 계획이다.

위생조사 결과 금지해역으로 판정된 지역의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채취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안전해역에 대해서는 대표품종 선정 등 브랜드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료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과장 장철호, 사무관 김동욱

56.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과 무관

해마다 찾아오는 비브리오패혈증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생산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브리오패혈증예방을 위한 홍보물 7만부를 제작하여 수협, 병원, 각시도, 지방청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생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비브리오패혈증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하절기 수산물 안전 섭취요령을 적극 홍보하였다.

그 동안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이 없으나 사람과 사람간에 전염되는 것으로 잘 못 알려져 매년 하절기가 되면 수산물 섭취를 기피하여 수산물의 소비둔화는 물론 하절기 먹거리 문화에도 많은 걱정이 되어왔다.

그러나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35세 이하의 젊은 층의 환자 발생사례는 없고, 감염자의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자, 간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로 파악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균(*Vibrio vulnificus*)은 -5°C 이하 또는 60°C 이상 온도에서는 발육하지 못하며, 특히 수돗물과 식초에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어·패류를 저온에 저장 또는 가열처리하거나 먹기 전에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만 하면 감염될 우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여름철에도 언제든지 생선회를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다. 다만 면역력이 약한 만성간질환자, 당뇨병자, 알코올 중독자 등의 경우 여름철에는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끓이는 등 익혀서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료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과장 장철호, 사무관 김동욱

57.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우리나라의 10대 수산물 교역국의 하나인 인도네시아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 해양수산부 장관은 2005년 9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에 최종 합의, 서명하였다.

2003년부터 2년에 걸쳐 양국 해양수산부가 협의해 온 동 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인도네시아 수출공장의 등록 및 수출전 사전검사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이중적인 위생점검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약정은 양국이 합의하여 지난 2005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으며 본 약정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06년 2월 현재 우리측 6개 및 인니측 66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양국 수산물 교역량 증가추세를 감안해 불 때 해당 등록 공장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정의 주요내용으로는

- 수출 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안전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수출국 검사·검역기관에 해당 공장의 등록을 의무화 시켰으며,
- 수출국 검사·검역기관은 해당 공장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출입의 위생점검을 수용토록 약정에 구체화 시켰고,
- 수출전 수산물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위생증명서 발급을 강제하였으며,
- 수입국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선적분의 폐기·반송을 의무화하였고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을 잠정 중단시키는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동 위생약정이 체결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수산물 교역과 관련, 위생문제로 인한 무역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국 위생 당국간의 긴밀한 협의 및 현지점검·지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등록공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팀장 장철호, 서기관 윤상린

58. 횃감용 수산물도 품질인증제 시행

금년부터는 넙치, 조피볼락 등 횃감용 수산물도 ‘수산물품질인증제’가 도입돼 보다 안전한 회 맛을 즐길 수 있게 됐다.

2005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 고시에 따르면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현재 68개 품목에서 횃감용 수산물, 냉동수산물 등을 대폭 추가해 1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그 동안 관능 위주의 품질기준에서 항생물질, 중금속, 마비성 패독 등의 위생·안전성 항목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품목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등 17개 횃감용 품목과 고등어, 갈치 등 19개 냉동수산물이 추가 신설되었다.

또 수산물 건제품을 10개 품목에서 마른홍합, 마른굴, 콩치과메기 3개 품목을 추가하고 수산특산물 중 조미가공품을 2개 품목에서 조미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품질기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분, 형태, 설탕 등의 관능위주에서 중금속(총수은, 납, 카드뮴), 항생물질, 마비성 패독,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이산화황, 착색료 등을 포함해 위생·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수산물 품질인증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수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의 금리를 연4.5%에서 연3.5%로 인하해 1억2000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자료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팀장 장철호, 서기관 양금철

59. 싱싱회 소비촉진

살아있는 활어회 대신 일정시간 숙성시킨 후 먹는 일명 ‘싱싱회’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05년 12월 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및 구내식당에서 행사 당일 식사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회와 판매행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시식회 등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한바 있으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무료 시식회와 판매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싱싱회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비기반 저변확대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싱싱회’란 해수부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고유 브랜드이며, 현재 4개소 (인천, 경북 칠곡, 경북 포항, 경남 거제시)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

해수부장관은 전 국무위원에게 싱싱회 샘플을 보내 각 부처 행사 및 모임에서 싱싱회를 애용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여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양했다.

한국싱싱회가공업협회에서도 싱싱회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연말에는 한달 동안 판매가를 20% 할인한 1Kg(5인분)에 28,000원에 공급하는 행사를 하였다.

“그동안 싱싱회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대도시 및 대형소비지 위주로 무료 시식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난 정부종합청사에서의 시식회는 각 부처의 연말연시 행사 등 회식자리에서 값싸고 맛있는 싱싱회를 많이 소비해 주도록 홍보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적절한 행사를 개최하여 효과를 극대화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료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팀장 장철호, 서기관 양금철

60.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운영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단계별 위생관리 상황, 생산조건 등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이 구축돼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이다.

2005년 12월에는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마트 월드점에서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력수산물 이력 확인’ 시연회를 열고 원산지, 생산자, 항생물질 검사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롯데마트는 ‘수산물 추적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약정서’에 서명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품목이었던 굴, 넙치, 김을 포함하여 금년에는 10개 품목을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적용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이력수산물 취급점을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력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이력 수산물의 이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개체 식별번호를 판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의 화면에 입력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www.traceseafood.net)을 이용해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수산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생산자 및 주소, 입·출하 일자 및 장소, 운반 및 가공업체, 사업장 위치, 가공일, 출하일, 첨가제 등 제품상태와 위생안전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자료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팀장 장철호, 사무관 김종실

61. 서울 수산식품 전시회 개최

2005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 홀에서 (사)한국수산물 유통가공협회 주최로 “2005 서울 수산식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서울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는 수산식품관련 전문행사”로서, 수산물 품질향상 및 안전성 제고에 관한 각종 정책을 홍보하고, 웰빙 수요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및 기능성 수산식품 전시를 통한 수산물 시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둔 전시회였다.

지금까지 수산전시회는 일반식품 전시회에 포함되어 개최되는 수준이었으나 고품질·안전수산식품에 대한 인식고취로 확고한 소비계층 창출을 위한 행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수산식품만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특히, 본 전시회는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의 밥상에 올린다는 컨셉을 설정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 한바 있다.

본 행사의 전시관은 수산전통식품 관련업체 및 품질인증품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품질인증관, 생선회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싱싱회 소비촉진을 위한 싱싱회관 및 인터넷 수산시장 전시관 등으로 구성하고, 수산식품에 관한 수산식품 정책 홍보관도 설치하여 종합적인 수산식품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주요 참가업체로는 동원산업, 한성기업, 사조산업 등 수산관련 대기업을 비롯하여, 품질 인증업체와 한국생선회 협회 및 한국 싱싱회 가공협회 등 총 101개 업체 및 기관이 참가하였으며, 동 전시회 기간 동안에 수산업계의 바이어,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등 2만 여명이 방문하여 침체된 수산업계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에도 4월 중순에 같은 장소에서 제2회 수산식품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팀장 장철호, 서기관 양금철

VI. 월양어업 경쟁력 제고

62. 유엔의 저층트롤 및 참치연승 논의에 적극 대응

국제해양법 당사국 10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해양 및 해양법 제6차 비공식회의가 2005년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유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어업의 공헌 및 해양폐기물 등 이었으나, 주된 논의는 저층트롤 및 참치연승 모라토리움(조업 금지) 문제에 집중되었다.

대부분 서구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가 등 연안국들은 계속 자행되고 있는 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공해상 저층트롤 조업금지를 즉각 선언하도록 적극 공세를 취하였다.

또한 “바다거북 회복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단체 및 뉴질랜드, 호주 등은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참치연승어업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공해상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을 지정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단은 저층트롤 및 참치연승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문제는 책임있는 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또는 지역수산기구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유엔에서 정치적 타협을 할 산물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저층트롤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식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입증이 되더라도 어촌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조업국의 노력으로 제60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권고안에는 제59차 수산결의안의 적극이행을 촉구하는 것만 포함되고, 새로운 저층트롤 모라토리움 선언 문구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향후 객관적인 과학정보가 밝혀질 경우 저층트롤어업은 계속해서 상당한 조업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의 적극적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양수, 서기관 오광석

63. 호주(濠洲) 수역내 월양어업 진출기반 마련

해양수산부 장관은 2005년 3월 12일 이탈리아 로마 FAO(세계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세계 수산장관회의 참석 기간 중 Ian McDonald 호주 농림수산 장관과 양국간 수산분야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어업협력사업의 추진관련 사항 등에 합의하였다.

두 장관은 1983년 양국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으나 1990년 초반 이후 실질적인 어업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의 새로운 어업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수산업에 한국 수산기업들이 합작 및 투자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은 Svein Ludvigsen 노르웨이 수산부장관과도 협의를 갖고 노르웨이가 속한 EFTA와 한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및 양국간 수산기술 협력 등 양국간 현안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과 EFTA간의 FTA협상에서 양허의 방향과 범위가 가장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산기술발전을 위하여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는 형태의 수산협력기금 창설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한편, 199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세계수산 최고책임자 회의인 FAO 수산장관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수산분야의 쓰나미 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추진현황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정부가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IUU 어업 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등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세계 수산장관 참석 대표들은 금번 회의에서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쓰나미 피해의 조기복구를 위해 정부차원의 관심제고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로마 수산장관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양수, 사무관 김현종

64. 침체된 원양어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세계적인 고유가속에서 원양어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자 침체된 원양어업의 탈출로를 모색하기 위해 2005년 5월 『원양어업 생존경영전략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부, 국회, 학계, 업계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움을 통하여 원양어업의 현실에 고민하고, 희망 있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선박의 노후화, 고유가에 따른 조업 경비 상승, 구인난, 어가하락 등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 정부, 업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정기국회에서 선박직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우리 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였고, 정부와 업계, 학계는 현장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발굴된 허가제도 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원양어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2006년 3월중에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업경쟁국가와 비교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후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신조와 병행 외국의 저선령 중고선을 도입하여 노후어선대체 희망자에게 허가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어장 개발 및 연안국가와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가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05년에 개발한 원양어선의 “연료비 절감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될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감소되는 원양세력을 조기에 연착륙시켜 생산량은 연간 50여만톤, 선박척수는 400여척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세계 주요 원양어업국으로 위상을 지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양어업을 해외 연안수산가공업과 해외 연안양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원양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킬 계획이다.

* 어선/생산량(천톤) : ('90)810척/ 925→ ('00)535척/ 651→ ('05)410척/ 552

자료 :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 조강현, 사무관 고원식

65. 러시아수역 명태 어획쿼터 6,000톤 추가 확보

해양수산부와 러시아 수산청은 2005년 9월 29일 개최된 한·러 양국실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2005년 명태쿼터 20,500톤 외에 추가로 6,000톤을 제공키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이 추가로 확보한 어획쿼터는 2005년 9월초 러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추가쿼터 배정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물밑 외교활동을 강화한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으며, 또한, 2004년 9월 러시아 정상 방문시 이루어진 양국 정상간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합의를 실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추가 쿼터 확보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업허가장 발급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러시아 식품위생감독청은 러·중 어업공동위(2005.10.20-27)에서 제3국에 명태쿼터 배정을 반대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는 추가쿼터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러시아 농업부 장관에게 조속히 허가장 발급을 요청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명의의 서신을 송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차관보가 Gleb Alexandrovich IVASHENTSOV 주한러시아대사에게 허가장 조속 발급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아울러, 조업허가장 조속 발급문제를 APEC 양국정상회담 의제에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2005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에 요청하였으며, 한·러 외교장관회담 및 한·러 통상장관 회담시에도 허가장이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요청한 결과 러측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허가장 발급을 약속하여, 회담 이틀 전인 2005년 11월 17일 러시아 동식물위생 감독청에서 우리나라 북양트롤어선 5척에 대한 허가장이 발급되었다.

또한, 허가장 발급과 동시에 신속한 조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5년 11월 25일 조업을 개시하여, 12월말까지 26,000톤의 명태를 어획하는 성과를 거두어 원양어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여 우리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한 어획쿼터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 조강현, 사무관 강윤석

66. '06년도 러시아수역 어획쿼터 합의

정부는 제15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고, 2006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내 우리나라 조업 어선의 어종별 어획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과 러시아 연방수산청 부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하였다.

동 회의결과 우리어선이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2006년도 어획쿼터는 명태 20,500톤, 오징어 6,000톤, 대구 2,650톤, 꽁치 2,500톤, 가오리 600톤, 청어 250톤, 복어 200톤 등 총 32,700톤이며 조업어선의 척수는 명태트롤 12척, 대구 저연승 4척, 꽁치붕수망 18척, 오징어채낚기 132척등 총 166척으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이 배정받는 2006년도 어획쿼터는 전년도 어획쿼터 32,250톤에 비해 청어 및 복어쿼터 450톤이 증가한 총 32,700톤으로, 이는 러시아측의 혼획에 대한 허용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우리어선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신규로 확보한 것이다.

한편, 2004년도까지는 당해연도 조업시 러시아측의 조업규정을 위반한 어선이 합의 의사록에 첨부되어 다음해에 어업허가장이 발급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5년도에는 조업규정을 위반한 선박이 없어 양국간 어업분야의 협력이 크게 진전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복어류 자원에 대하여 200톤의 TAC를 신설·배정함으로써 오징어채낚기 조업선에서 복어를 조업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명태, 오징어 및 꽁치어획 쿼터에 대하여 러시아와 외국과의 쿼터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쿼터를 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 조강현, 사무관 강윤석

67. 원양어선등 연료비 절감 연구개발 성공

2005년 8월부터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어선, 연료비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원양어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 연료유인 MGO(마린가스오일)를 중질유인 '마린 퓨얼30'(MF30)로 대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연구로써 연구결과 배기가스 배출량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연료비가 30%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비 절감규모는 현재 라스팔마스의 우리 원양어선들이 MGO가격을 톤당 \$600, MF30는 톤당 \$420에 공급받고 있으므로 톤당 \$180이 절감되어 척당 연간 2억 6,400만원의 절감효과가 거양된다.

연구수행 과정 중 원양트롤어선 27척이 연료비절감장치를 장착 정상운항하여, 연료비 절감효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고, 이들 어선의 연료비 절감효과만 계산해도 연간 71억 2,800만원 이상이 절감되며, 앞으로 전체 원양트롤 181척이 장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 연구개발 시스템으로도 원양참치연승 192척, 근해 대형트롤 58척, 근해 쌍끌이 등 저인망 250척의 일부 선박에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밀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현재 시험중인 연료비 절감장치 2가지 모델의 장점을 살려 새로 통합된 시스템을 2006년부터 2개년에 걸쳐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에 있다.

그동안 고유가시대에 많은 어선들이 연료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연구결과로 인하여 많은 어선들의 연료비가 절감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값싼 중질유(MF100) 사용이 가능한 연구개발에도 힘쓸 것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 조강현, 사무관 조성대

VII.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68. WTO 제소를 통해 對日 김 수입쿼터(IQ) 대폭 확대

한국의 WTO 제소로까지 이어졌던 한일 김 수입쿼터 분쟁이 2015년까지 한국에 대한 김 수입쿼터량을 1,200만속으로 증량한다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가운데 2006년 1월 20일 양국간 최종 합의되었다. 주요 합의사항은 ①한국김 수입쿼터 물량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200만속으로 증량, ②한·중 수입쿼터 분리, ③모든 김 제품에 대한 일본시장 개방, ④쿼터 미소진시 재할당 실시 등이다.

그동안 한국 김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던 일본정부가 2005년부터 중국 등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수입 허용을 결정함에 따라(2005.10.21), 우리가 사실상 독점해 온 일본의 김 수입시장 기본구도는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새롭게 변화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쿼터 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2004년 12월 1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일본 김 IQ(Import Quota) 제도를 제소했다.

분쟁해결 과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WTO 패널대책반을 구성(2005.3.22)하여 치밀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공식적 WTO 패널절차와 더불어 일본과의 비공식 협의도 꾸준히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7차례 비공식 과장급 협의를 거쳐 2006년 1월 20일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양국이 최종합의를 함으로써 14개월간의 김 IQ 분쟁이 종결되었다.

이로써 ①매년 30만속씩 증량되어 오던 김 IQ 물량의 대폭 확대(연95만속이상)에 따른 3,710억원의 누적 수출증대, ②한·중 수입쿼터 분리에 따른 수출 안정성 확보, ③구운김, 자반김 등에서의 시장 개방에 따른 수출 품목의 다양화, ④쿼터 미소진분에 대한 재할당에 따른 수출증대 등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

WTO 제소 및 치밀한 협상력 발휘를 통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對日 김 수출 물량을 확대했으나, 향후 김 수출을 놓고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부터는 생산어업인,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가 일심동체로 좋은 김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 박호근, 사무관 조운영

69. 수산분야 대외 경제 협력 확대 추진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주요 어장인 남태평양 지역 섬나라 나우르에 46인승 스쿨 버스 1대와 1,220만원 상당의 학용품 등을 제공하고, 2005년 2월 24일 라우르 현지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참치류의 회유경로인 라우르 수역은 우리 원양어선이 매년 입어하는 지역으로,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참치 어획량 239천톤 중 89%인 211천톤 정도가 라우르를 포함한 태평양에서 어획되고 있다.

태평양 연안국에 대한 물자지원 사업은 연안국들의 수자원 보호 정책과 연안국 어업인들의 부정적 인식 확대로 해외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선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개도국 지원이라는 인도적 측면과 우리 어선의 안정적 입어 지원이라는 실리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수산분야 대외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6년에도 적극적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입어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우선 2억 4,000만원 규모의 물자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지원 물자 종류와 지원대상국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양수, 사무관 이규선

70. 수산분야 대외 협력·홍보 활동 강화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 15개국 남미 대사 초청, 기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해양 수산 업무의 대외적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적 협조 사항에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 2005년 5월, 데이빗 테일러(David Leslie Taylor) 주한 뉴질랜드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단 10명 및 외교통상부 간부 등을 초청,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2년 여수 EXPO 개최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2005년 9월에는 중남미 15개국 대사 초청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등 우리 정부의 수산분야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자원회복계획 등을 집중 홍보했다.

해외 고위 수산인사와의 개별 접촉을 통한 협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 노르웨이, 오만, 기니 등 주요 수산국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해 해외수산장관들과의 면담은 우리 원양어선의 안정적 입어 지원 및 국가간의 이견 해소에 주안점을 두어, 기니장관과의 면담에서는 ‘기니측의 어업협정 미체결국 입어 금지 규정에 우리 어선의 적용 유예를 인정’받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수행하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업무에 대한 국제적 홍보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2006년은 2012 여수 EXPO 지지 활동 등 주요 이슈가 있는 해인만큼, 고위급 수산인사 초청, 외교 관계 활용 등을 통한 국제적 홍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양수, 사무관 이규선

71.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온다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2005. 7. 25~27기간 중 개성에서 남측 심호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과 북측 조현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단장간에 출퇴근 회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쌍방은 서해상 평화정착 및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 도모 등 수산협력방안을 협의하여 6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간 평화정착·공동이익 원칙 하에 서해상 일정수역을 정하여 공동어로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어로의 수역과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서해상 정해지는 수역에서 제3국어선의 불법어로활동 방지를 위하여 출입통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사업 진행에 협력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수산물 우량품종 공동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진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수산분야 협력을 통해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였다.

자료 : 어업자원국 남북수산협력팀 팀장 임현택, 사무관 윤상훈

72. 제2차 APEC 해양장관회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해양수산부 장관은 2005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해양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중서부태평양 어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 회의는 2002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의 후속회의로서 참석 장관들은 제1차 회의 시 도출된 “서울해양선언문”의 이행현황을 집중 검토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발리행동계획”을 채택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하여 “장관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임 의장국 대표로서 “발리행동계획”의 수립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해양경영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번영 문제를 부산 APEC 정상회의 시에 논의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APEC 정상선언 및 합동각료성명서에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방안이 반영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동 회의 기간 중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5개국과 각각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와는 양국간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과는 양국간 수산협력합의 의사록에 서명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차 APEC 해양장관회의 개막식 직후 Jusuf Kalla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양국간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동 회동은 APEC 해양장관회의의 주창국으로서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과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측 제의로 이뤄졌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양수, 사무관 김현중

73.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 울산총회 성공적 개최

세계 고래자원의 합리적 보존·이용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의 제57차 회의가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4주간 우리나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수산 국제회의사상 역대 최대규모로 59개 회원국, 2개 비회원국, 6개 IGO, 70개 NGO, 53개 국내외 언론사 등 600여명, 연인원 11,000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의 주요성과로는 첫째, 우리나라가 1978년 IWC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주변국의 밍크고래 자원 목시조사 협력에 관한 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IWC에 의한 고래자원 심층평가를 촉진시키고 향후 우리나라 고래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둘째, 회의기간 중 BBC 등 70여개의 국내외 언론이 울산 현지 취재활동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친절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달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

셋째, 대규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제포경위원회(IWC) 울산회의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5억7,6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5억 8,600만원, 취업유발효과 391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총회의 최대쟁점이었던 상업포경의 재개 문제에 대하여는 포경지지국과 포경반대국과의 극심한 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또한, 2006년도부터 남빙양 포획두수를 2배로 늘리는(400±10% → 850±10%) 남빙양 과학조사 포경계획을 지지하여 달라는 일본의 요구는 이에 반대하는 호주의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자진 철회하였으나, 일본은 과학조사 포경이 국가의 고유권한임을 들어 계획대로 과학조사 포경을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양수, 사무관 안치국

74. 적극적인 WTO/DDA 협상 대응 추진

2005년 개최된 WTO/DDA 관세 협상(9회) 및 보조금 협상(7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수산분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에 임하는 한편, 한·일·대만과 공동 제안서 제출 등의 공조를 통해서 수산물 무세화 및 포괄적인 수산 보조금 금지 가능성을 낮추었다.

2001년 출범한 WTO/DDA 협상은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과 수산보조금의 특별 규율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수산분야에는 매우 혹독한 시련이었다. 설상가상으로 2003년초 수산분야는 전기, 전자, 스포츠, 화학 등의 분야와 함께 무세화가 논의됨으로서 수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2005년 12월 협상 타결을 앞두고 그동안 주춤했던 수산물 무세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노르웨이를 포함한 6개국이 10월에 수산물 무세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비공식회의 및 본회의에서 수산물 무세화가 자원의 고갈을 가속화 시키고 최빈 개도국의 특혜를 침식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한·일·대만 등과 공동제안서 제출 등을 통해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방식이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지원 수단조차 제약함으로써 제조업 등에 비해 수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주장하였고,

어촌어항개발, 어선감척, 자원조성 보조금 등은 과잉어획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허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소규모 영세어업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각료선언문에서 무세화 논의는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음이 명시됨으로써 수산물 무세화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수산보조금의 경우도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을 초래하는 일정 형태의 보조금을 금지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포괄적인 수산보조금 금지도 가능성이 낮아졌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장 방태진, 사무관 양혜원, 사무관 최현호

75. WTO 제6차 홍콩각료회의의 참석 및 결과

2005년 12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홍콩에서 148개 회원국 통상각료 및 각국 관계관, NGOs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차관보외 관계자 5명이 참석하여 개막식, 폐막식 등 공식회의와 UNEP, FAO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비공식 회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수협 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원양협회 등 업단체 관계자 34명이 협상기간 동안 홍콩에 머물면서 한일 공동 심포지엄, 집회 참석 등 NGOs 활동을 전개 하였다.

협상참여와는 별도로 협상기간 동안 홍콩에 머물고 있던 국회의원, 업단체 관계자,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협상 동향을 설명하는 등 협상의 투명성제고 노력도 병행 하였다. 차관보 주관 하에 국회의원, 업단체 관계자, 기자단과 간담회(6회)를 개최하여 협상동향과 협상과정에서의 애로점을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협조사항 등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제네바대사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수산분야 협상 담당 참사관 등과 면담을 통해 수산분야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수산분야의 입장이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협상 기간 중 협상에 참여한 업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집회 참석시 분위기에 휩쓸려 과격시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동 기간 동안 협상에 참여한 업단체 관계자 34명은 모두 사고 없이 귀국하였다.

금번 홍콩각료회의에서는 개발분야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주요 핵심 사안들에 대한 타결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협상 주요그룹인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에서 협상 세부원칙을 2006년 4월 30일까지 마련하고, 각국 이행계획서를 2006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등의 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협상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장 방태진, 사무관 양혜원, 사무관 최현호

76. 민·관의 국제협상 대응능력 강화

WTO/FTA 협상의 투명성 제고 및 어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협상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도 WTO/FTA 협상 대책반 회의, 지역설명회 등의 민·관 공동 협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상대응력을 강화하였다.

어업인,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WTO/FTA 협상 대책반을 2001년 WTO/DDA 출범 이후부터 운영(총 13회)해 왔으며, 2005년도에 차관보 주관 하에 협상 대책반 회의를 2회 개최하여 협상전략 및 FTA 양허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여 왔다.

또한, 3대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속화 되고 있는 WTO/DDA 및 FTA 협상동향을 설명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협상결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산경남, 전남북, 강원 등 3대 권역에서 실시한 설명회에는 약 500여명의 어업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과 정부 대책 등에 질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범수산환경연대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대학교수, 법률가, 연구원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자문그룹회의(17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반영하여 오고 있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장 방태진, 서기관 이안호, 사무관 양혜원, 사무관 최현호

77. FTA 수산분야 협상대응 강화

최근 FTA협상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와 FTA협상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2005년도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지난해 타결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민감품목인 고등어에 대한 관세할당(TRQ)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넙치 등 활어류와 해조류 등 주요 민감품목 72개 품목(우리나라 전체 407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EFTA측의 교역량을 고려하여 EFTA측에 할당한 고등어 TRQ는 상징적 의미의 500톤을 제외한 모든 물량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과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었다.

아울러,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노르웨이 등과의 수산분야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수산선진국들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아세안(10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및 2006부터 추진예정인 인도, 미국, MERCOSUR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FTA협상에서 산업기반이 취약한 수산분야의 민감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FTA 수산분야 협상대책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가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영향 최소화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ASEAN : 동남아 국가 연합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등)

※ MERCOSUR :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자료 :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장 방태진, 서기관 이안호

78. 수산물 수입증가, 조정관세로 억제

2005년 12월말 수산물 수입은 전체 23억 79백만\$로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하였다(물량은 2% 감소). 수산물 수입은 최근 4년간 두자리 숫자의 증가 추세를 보여 오다 2005년에 처음으로 한자리 숫자의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933백만\$), 러시아(277백만\$), 일본(173백만\$), 미국(152백만\$)이 전체 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종으로는 냉동조기, 냉동오징어, 냉동갈치, 냉동꽃게 등 60여종이다.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한 우리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활어 등 생산 어업인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관세율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 조정관세 적용대상은 활뱀장어, 활돔, 활농어, 냉동명태 등 총 11개 품목이며,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은 27%에서 70%까지 각기 다르다. 2005년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수입은 28만8,905톤, 3억5천624만3천\$로 2004년 대비 물량으로 2.7%, 금액으로는 5.7%가 감소하였으며,

제품별 수입 특징을 보면 여름철 보양식으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는 활뱀장어가 물량 68%, 금액 63%의 감소 현상을 보였고, 활농어는 물량 49%, 금액 43%, 활민어는 물량 38%, 금액 37%의 감소 현상을 나타내는 등 전체 11개 품목에서 7개 품목이 수입 감소를 보여 동 조정관세가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나타내었다.

향후 조정관세는 WTO/DDA협상, 각국과의 FTA 협상 추진 등으로 항구적으로 유지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수입증가 예방을 위해 수입 예보제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수입 수산물 수입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 박호근, 사무관 박환준

79. 새로운 해외시장개척

WTO/DDA협상타결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수산물 수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리 수산물의 국내외 홍보 및 수출상품 카탈로그의 제작·배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새로운 바이어 및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2회 실시하였는바, 2005년 9월에 일본 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 후쿠오카 닛코호텔에서 간담회와 수출상담회를 실시하여 162만\$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양하였고, 11월에는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증대를 위해 중국 북경 및 청도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벌여 423만\$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또한, 전복, 넙치 등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내 국제 공항 및 국제 여객선터미널 등에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 상해(홍교 공항) 및 북경(도심)에서 라이트박스를 통한 광고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아리랑 TV를 통하여 전세계 160여개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조미김, 활넙치 등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고유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한편,

수산물 수출업체 90여 업체의 회사소개 및 제품소개를 담은 카탈로그 7,500부를 제작, 국내외 공관 등에 배포하였고, 수산물 수출상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10개 품목의 포장디자인을 새롭게 단장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개척지원 사업을 통하여 일본시장에 의존(65%)하고 있는 수출시장을 다변해 나가는 한편,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 박호근, 사무관 강은성

80. 수산물 수출 촉진

지난 1997년부터 수산물 수출진흥을 위하여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고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대외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국제식품(수산)박람회에 우리 수산물 수출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에 일본, 미국, 중국 등 7개국에서 개최된 동경식품, 보스톤수산, 브뤼셀수산, 방콕식품, 동경수산, 홍콩식품, 미서부식품, 호주식품, 중국국제어업, 상해식품박람회 등 총 10회의 국제식품박람회에 85개 업체가 참가토록 지원하여 지난해 53백만\$의 약 35%가 신장된 71백만\$(한화 약 710억원 상당)의 수산물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2004년도까지 마른김, 조미김, 조미오징어 및 참치통조림 등 간편 조리식품의 출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경쟁력이 있는 활전복, 활넙치, 활대게 및 싱싱회 등 전시도 추진하여 바이어 및 관람객으로 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다.

또한, 참가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거리 개최 국제박람회라도 종전에 지원하지 않았던 왕복항공료의 일부(20%) 지원, 수조 등 고가의 개별 비품 지원(100만원 한도) 등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동 사업은 2004년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는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양부에서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마케팅 능력 확대를 통한 수산물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 박호근, 사무관 강은성

81.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가입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13일 전미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에 가입함으로써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전 세계 5개 참치 자원관리 국제기구에 모두 가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IATTC는 1949년 5월에 설립되어 동부태평양수역의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참치류의 최대 지속가능 어획량 확보를 위한 국제 자원관리 협력기구로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총 15개국이 회원이며, 사무국은 미국 캘리포니아 라호야에 있다.

동 기구가 관리하는 수역은 우리나라 원양참치어업에 있어 중서부태평양수역 다음으로 중요하며, 매년 120여척의 눈다랑어 연승 조업선이 조업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눈다랑어 17,317톤(전체 원양참치 어획량 260,396톤의 7%)을 어획한 바 있다.

동 기구가입으로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원양어업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동 기구의 규제수단(국별 어선척수 제한 등)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어선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대만, 중국 등 후발 조업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국가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도 12,576톤 수준의 눈다랑어 어획쿼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 기구의 가입을 기념하고, 국제적인 자원관리노력에 적극적 협력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제74차 연례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였으며, 동 회의는 2006년 6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 :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양수, 사무관 안치국